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재정부 경제정책방향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



규제혁파·기업활력 제고

- 강력하고 체계적인 규제혁신 거버넌스 마련
- 과도한 규제 신설 방지 및 혁신적 규제완화 방안 도입



규제비용
감축제



규제
일몰제



규제권한
지방이양



규제
원샷해결

- 관행적으로 운영되어온 규제·제도 재정비



제7장 경제정책방향

민간중심 역동경제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운용으로
경제활력 제고·저성장 극복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업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 **기업의 법인세·배당소득과세 등 세부담 완화**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 최고세율(現 25%) 22%로 인하

[배당소득과세]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 조세체계 개선

- 세대 간 기술·자본이전 촉진을 위해 **기업승계 활성화**

매출액 기준 2배 이상
 대폭 확대(0.4조원→1조원)

사후관리 기간 축소
(7년→5년) 및 요건 완화

- **기업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금융 인센티브 보강**



중소·벤처기업 육성

-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 및 혁신기반 조성

신산업
진출지원

{ 스마트공장 지속 확산
동일업종내 신사업 전환 인정 }

- 민간 주도·혁신 지향의 역동적 벤처생태계 조성



민관 핵심 경제정책방향

민간중심 역동경제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운용으로
경제활력 제고·저성장 극복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불공정행위 엄단 및 경쟁제한적 규제 철폐
기술탈취 행위 - 손해배상 강화 및 전속고발제도 운용
- 플랫폼 경제, 하도급 공정거래 시스템 구축



납품단가 연동제
정당하게 제값 받는
여건 조성



플랫폼 경제
플랫폼·소상공인·
소비자 상생

진입제한

기술탈취

불공정행위



제5회 경제정책방향

체질개선 도약경제

5대 부문 구조개혁으로
한국경제 성장경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공공·연금 개혁

비대해진 공공부문 효율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혁신**
- ②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강도 공공기관 혁신**
- ③ 적정 노후소득보장·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



노동시장 개혁

획일적 노동규제·관행을
노사 자율·선택 방식으로 전환

- ④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근로시간 제도 합리적 개편
- ⑤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제5회 경제정책방향

체질개선 도약경제

5대 부문 구조개혁으로
한국경제 성장경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교육개혁

현장수요 맞춤
미래 혁신인재 양성

- ⑥ 첨단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혁신 및 자율성 강화
- ⑦ 현장 수요에 맞는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 구축



금융혁신

금융산업을 민간 중심 성장의
핵심 축으로 발전

- ⑧ 디지털 금융혁신 촉진 및 민간의 역동적 혁신 지원 강화
- ⑨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선진화

서비스산업 혁신

서비스 생산성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 ⑩ 新서비스 창출을 위해 규제 합리화 및 육성기반 마련
- ⑪ 제조업-서비스업 간 지원 차별 해소



과학기술·R&D 혁신

- 신기술 확보·신산업 개발 중점의 과학기술·R&D 정책 수립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



R&D 평가 시스템
마련·실시



R&D 예산 사업 규모
1,000억원으로 확대



국제협력 R&D
프로젝트 추진

- 기술사업화, 국제표준화 등을 통해
신기술 기반의 혁신 지원



④ 경제 경제정책방향

미래대비 선도경제

미래 구조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하겠습니다



첨단 전략산업 육성

- 신산업 육성전략 마련 및 반도체 등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
- 인공지능 등 유망 신산업 전략적 육성 및
원전 경쟁력 강화 지원



유망 신산업
육성



원전경쟁력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 범정부 민관합동 인구대응 체계 마련

경제활동 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비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	------------	------------	-----------

-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고령사회 대비 및 저출산 대응 강화

경제활동 인구 확충	경력단절여성 복귀지원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 외국인력 도입 제도 개선
저출산 대응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육아휴직·배우자 출산 휴가기간 확대



④ 경제정책방향

미래대비 선도경제

미래 구조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하겠습니다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 온실가스 감축경로·이행수단 재검토
 - 배출권 총량, 할당방식 등
- 기업 탄소중립 투자 및 저탄소 소비 활성화 인센티브 마련
- 순환경제·ESG 생태계 조성 지원 강화
 - 폐플라스틱, 폐배터리 재활용 등 순환경제
민간 중심 ESG 생태계 조성

사회안전망 강화

- 취약계층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 보강**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충**



노인
기초연금 및
맞춤형 일자리 제공



장애인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한부모
양육비 지원기준 단계적상향
(중위 52→63% 이하)

- 서민 주거비 경감,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
주거복지 지원 강화



제7회 경제정책방향

함께가는 행복경제

취약계층 중심 생산적 맞춤 복지 구현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근로 유인 및 기회 확대

- 저소득 근로자·구직자 근로 인센티브 확대
 - 구직자·기업별 특성 고려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확대
- 청년 일자리·주거·교육·자산형성 등 지원 확대



청년도약
프로젝트



청년맞춤형
주거지원



장기 자산형성
지원상품 신설

복지시스템 고도화

-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해 고품질 서비스 제공
- 고용·교육·간호간병 등 서비스 분야별 전달체계 개선



제2회 경제정책방향

함께가는 행복경제

취약계층 중심 생산적 맞춤 복지 구현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

- 권역별 경제권 형성, 강소도시 육성 등 지방 경쟁력 강화
- 세제·재정 지원을 통해 자생적 균형발전 도모



지방이전
세제지원



균특회계
역할 강화

- 지방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강화





민생안정

• 물가 안정 및 서민경제 부담 완화

- 생활 밀접 품목 생계비 부담 경감
-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 수급 불안 품목 선제적 대응

• 주거 안정



▲ 경제정책 경제정책방향

당면현안 대응

민생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뒷받침 하겠습니다

위기대응

• 경제안보 대응

- 상시 위기경보 시스템 구축
- 해외 자원확보 및 유턴·외투기업 지원

• 위기관리 강화



위기대응
체계 마련



거시경제
시장영향 최소화



가계·자영업자
부채 연착륙 및 재기지원

